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성재



새해벽두부터 세종시 백지화를 들고 나온 현 정권의 정치게임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첨가경이다. 여권 내 경쟁과 여야 투쟁은 폭설 한파로 출고 배고픈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의 누적행위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타지역에 끼칠 파급효과보다는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이 정권유지 게임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정권도 잘 우려했던 전략적 카드로였다.

운영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현 정부는 일단 무리한 정치게임의 판을 깔아 놓고 충청도민의 여론을 호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

막장 정치게임, 세종시 수정안

도 속에는 여론이 호전되면 정치 라이벌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것이라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정치 라이벌도 차기 대권을 위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치 생명을 걸 것이다. 대통령 후보 선거 패배 후 가슴 속에 깊게 남아 있는 앙금이 다시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를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20년 후에도 완성될 세종시가 뭐가 그리 급하고 중요하다고 엄청난 국력을 정쟁에 소모하느냐는 의문

을 갖는다.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행위는 광기에 가깝다.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세종시 문제에 몰입하고, 언론매체는 매일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 문제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데 중요한 지면과 시간을 할애한다. 국가행정을 책임진 중앙부처 국·실장들이 세종시 홍보에 동원되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까지 홍보전에 합류했다고 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써먹었던 수법이 그대로 부활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게임은 이

보낼 메시지가 있다. 정부 여당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분할 정치게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OECD 국가 중 선두에 있다고 들며 있는 데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실업자 수가 300만을 넘었다는 데 금년을 말로만 '일자리 창출의 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증가했지만 내수침체로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태산처럼 쌓이는 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정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다. 정치를 잘해 다시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 집권의 원칙이다. 대통령이 날마다 21세기 한국의 국격을 얘기하면서 19세기 전제정치에서나 볼 수 있었던 권력투쟁으로 정권 안정과 장기집권을 시도하는 한 국격은 없다. 국민의 상식을 초월하는 막장 정치게임을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격을 논할 수 있었는가?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사회과학대학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말 뿐인 정부의 지방 이전기업 지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가 세운 보조금 총 예산은 826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전남남도 500억원 가량의 이전 보조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전국적인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는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면서 지방 투자 활성화에는 인색하게 하지 않는 단적인 사례인 셈이다.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방 투자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0억원까지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 불리한 투자여건에도 광주·전남지역이 꾸준히 기업을 유치해 온 데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같은 보조금 지원제도가 한 몫 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광주시의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전남도역

시 지난해 인구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투자 확대에 의해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수도권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차제에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전 기업들이 몰리는 풀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북에 집중 지원됐다. 수도권 규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공장 설립이 어렵게 되자 기업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원 방식 역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낙후도와 발전 정도에 따라 보조금은 물론 세계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 성장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구도심 활성화해야

광주시 동구 등 전국 7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도심 공동화 극복 방안 및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이들 구청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구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도심정비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구도심 공동화는 거의 모든 대도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 광주의 경우만 봐도 한때 '호남정치의 1번지'로 불리던 동구는 지난 1973년 31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지금은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하한선인 10만5천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이전에도 상무·하남·점단·운남지구 등에 대단위 택지개발까지 겹치면서 주민이 탈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구도심권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호남 유통의 대명사였던 충장로와 금남로에 소재한 상가와

빌딩은 거의 20%가량이 빈 채로 남아 있다. 특히 구 전남도청 인근은 밤만 되면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슬럼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구도심의 공동화는 급격히 도시팽창과 개발정책이 낳은 부작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구도심 공동화를 방치한다면 도시의 균형발전을 해치면서 결국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구도심과 신도심권 간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현상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구도심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자체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도심정비와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서 구도심화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새천년의 새로운 10년' '60년만의 백호(白虎) 해'라는 희망을 안고 시작한 경인년인 한파로 공포 얼어붙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도 새해 벽두부터 원화 값과 유가 급등, 금리 상승 조짐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경제가 재채기만 해도 감기에 걸리던 지역 상황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지역경제가 연초부터 팽창해지고 있는

이로 인한 진통은 지역민들에게 3중고(苦)로 다가온다. 지역경제의 타격은 물론이고 250여개 협력업체의 파해, 계속되는 파업에 대한 피로감이 그것이다. 오죽했으면 한 단체장은 "기아차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을까.

광주·전남의 노사분규 건수는 전국적으로 가장 적다. 광주의 경우 2004년

파업 신기록



35건 이후 2005년 7건, 2006년 5건, 2007년 2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근로손실률수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노조'라는 인식이 되지 기업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아차 등 대규모 사업장 계속돼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회사 측은 생산 차질로 인한 매출 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미 '20년 연속'으로 '최대' 파업 기록을 수립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기아차의 신 3고'라고 부른다.

2005년 7건, 2006년 5건, 2007년 2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근로손실률수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노조'라는 인식이 되지 기업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아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 분규 여파가 아닐 수 없다.

노사 협력 없이는 기업 경쟁력도, 고용안정도 없다. 노사간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금이라도 지역 정서와 상생의 의미를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재희



법원 주변을 오가다 보면 법원 건물 쪽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는 통곡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광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 새로이 생긴 것도 아니다. 어느 법원을 가더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광경이고 필자가 법관이 된 이래 늘 보던,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별 느낌이 없는 풍경 중의 하나이다. 법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법원의

지 않다. 억울하다는 사람 가운데에는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뭇가를 잘못 알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무리 공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단지 그

억울한 자들의 항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1인 시위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업무 방해할 정도로 심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어떤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사람의 무지로부터 돌리고 말 것인가?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받은 판결 대부분은 다른 법관이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들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공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판을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법원 주변에 모여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를 넘어서 법원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상대방 변호사가 담당 법관과 각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사실인 양 전달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한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전혀 없게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 법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향을 끼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서라도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원 인파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그간 우리 법원이 너무 인이하게 대처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법관들이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법원을 향한 원망의 시선이나 한서린 외침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회적 소외 노인 범죄 급증... 일자리 창출 등 관심 필요

신문에 나온 사회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도 있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팔팔하지만 사회에서는 퇴물 취급을 받는 틈새에서 벌어진 사회병리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며칠 전에 발표 자료를 봤더니 노인범죄가 1996년 살인범은 20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고, 방화범과 성폭행범도 네댓 배씩 급증했다고 한다.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4배나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나 사회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그 와중에 잠깐 신경을 못쓰고 있는 사이에 노인범죄가 자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듯하다.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기고

김영태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동반상승 등의 여파가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있음에도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석유 소비량에 있어서도 세계 7위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단계부터 집중관리하고,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청사관리에 있어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보다 에너지낭비요인을 찾아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내온도를 작년보다 2℃ 낮은 18℃로 유지하고, 여름철 방방온도는 27℃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승강

에너지절약 모두가 동참해야

특히, 새해 들어 연말 한파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량이 5~8일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만에 동계 전력수요가 하계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이상한파로 난방수요가 늘고, 경기 회복으로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는 저·고층을 분리하여 흠뻑으로 격층 운행하고, 비상용승강기는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난방공급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을 위해 자동판매기에는 타이머를 부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스위치형 콘센트를 각 사무실에 보급했다. 사무실 통로형광광램프를 최소한으로 켜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는 각 실과별 에너지 지킴이 운영을 통해 사무실 소등, 사무기기 전원 차단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사무실 권장 난방온도를 18℃로 낮추고 냉방온도는 27℃로 높이는 등 '자립고비 냉난방'으로 에너지 소비 10%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청사,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소비비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시설의 구조를 발굴·개선하는 등 공격적인 에너지절감 실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시민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생활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너지 절약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계약심사과장>

도시민들의 주말 농촌생활... 농민에 위화감 줘서야

최근 고향 마을에 한 채, 두 채씩 주말별장이 늘어나기에 이제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사람들은 아예 농민들과 융화하거나 섞이려는 생각은 별로 없고, 오히려 농민들 만나는 걸 꺼릴 정도로 자기네끼리만 어울리고 한다는 것이다.

있다. 주로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사와 상관없는 돈 있는 회사원, 회사 간부나 사장들, 도시에서 퇴직한 연금으로 생활자들이다 보니 농민들은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심지어 주말에 자기네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와 도로 곳곳에 세워두고 실컷 떠들다가 가는 경우도

물론 요즘 농촌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다만, 몇몇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농민들에게 안좋은 위화감만 심어주고 갈등을 일으키니 행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